

노인 부부가구의 빈곤: 성과 직업력의 효과*

김수정** · 김정석***

■ 국문 초록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있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노인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노인가구 중 최빈가구인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상황에 주목하였다. 노인'부부'가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노인부부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가구형태이며, 둘째, 노인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가구주' 혹은 남성노인의 경제력 변수(직종, 직업지위, 근로시간)를 대리변수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기여를 누락함으로써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부부가구의 빈곤을 분석하는데 있어 사회인구학적 요인뿐 아니라 남녀 노인개인의 과거 직업력이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주목하였다. 노인가구의 빈곤은 현재의 소득능력보다는 생애과정의 주된 일자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부부가구에서도 남편(가구주)의 연령, 학력, 최장종사직종이 부부가구의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의 직업력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내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종이 아니라 근로기간이 길수록 가구의 빈곤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노인들은 성별분절화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근로를 통해 가구의 빈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인빈곤을 이해하는데 있어 노인가구의 이질성 그리고 남성가구주의 경험뿐 아니라 여성노인들의 생애경험에도 주목하는 성인지적,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노인빈곤, 과거 직업력, 노인부부가구, 여성노인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김수정(주저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복지정책과 가족정책, 여성복지론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과 빈곤, 비교복지국가분석이다. E-mail: ksujeong@dau.ac.kr

*** 김정석(공동저자):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노년학과 가족인구학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인구고령화의 사회적, 정책적 패러다임에 대해 연구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E-mail: chkim108@dongguk.edu

I. 서론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2009년 현재 노인빈곤율은 최저생계비 기준 37.1%이며, 중위소득 50% 기준 48.3%로, 전체가구 기준 각각 13.1%, 16.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2010년 빈곤통계연보). 이와 같은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 노인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인 중 ‘누가’ ‘왜’ 빈곤한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노인가구의 빈곤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의 경제적 상황은 자신의 현재 소득력보다 과거 소득에 의해, 또 자신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자녀 혹은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개인적 특성만으로는 빈곤상황을 적절히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노인은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 비해 빈곤하고 또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집단보다 가난한데, 여기에 노인 내부의 이질성도 크게 나타났다(최현수·류연규, 2003; 이소정, 2010). 최현수와 류연규(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연령, 성별, 가구유형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데, 2000년 상대빈곤율 기준으로 65-74세 노인은 37.6%, 75세 이상은 29.6%의 빈곤율을 보이며, 여성노인은 36.3%로 남성노인보다 6%정도 빈곤율이 높았다. 또,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율은 59.1%로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는데 비해, 여성노인단독가구는 79.1%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처럼 노인빈곤의 내부적 이질성은 연령과 성별, 혼인지위와 가구유형이 교차, 누적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빈곤에 대한 연구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²⁾

본 연구는 노인가구 중 최빈가구가자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부부

- 1)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은 평균 13.3%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이어 노인빈곤율이 높은 아일랜드 역시 31% 수준이다.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OECD, 2009).
- 2) 최옥금(2007)에 따르면, 노인빈곤을 분석할 때 다른 가족구성원과 같이 사는 노인가구와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거가족구성원의 효과를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분석전략이지만,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역시 내부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 기타노인가구의 특징을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구에 주목하여 이들 가구의 빈곤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³⁾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대부분 자녀의 분거 결과 형성되며, 독거가구나 자녀동거가구로 이행의 이전 단계에 위치한다. 이 가구는 배우자와의 동거라는 특징을 갖는 동시에 세대간 부양을 받더라도 동거 자녀에 의한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가구와는 경제적 조건이 다르다.

노인부부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했을 때의 이점은 첫째, 자녀와의 동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고 자녀의 경제적 기여는 사적 이전규모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노년의 빈곤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생애사건은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사망이다(Dodge, 1995; Gillen & Kim, 2009). 부부가구에 대한 분석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생애사건 이전에 남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⁴⁾

셋째,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구유형(단신/부부/자녀동거/기타)을 통제변수로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부부가구에 속한 여성의 속성은 남성가구의 속성에 의해 대리되어 여성의 조건과 기여를 적절히 파악할 수 없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해는 상호관계성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별 불평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김정석, 2003). 부부가구에 대한 분석은 이와 같은 '관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기존연구에서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요인들로는 성, 교육

- 3) 통계청 인구총조사(2005년)에 따르면, 노인부부가구(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34%, 1인 가구 32%, 2세대로 이루어진 노인가구는 24%로 노인부부가구가 최빈가구 유형이다.
- 4) 미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은 여성노인의 빈곤율을 3배정도 증가시키고 배우자 사망 직후 1년내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ound et al., 1991). 또, 배우자의 사망(사별가구)은 여성노인의 빈곤을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남성노인의 빈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Burkhauser et al., 1988; Burkhauser et al., 1991). 따라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별가구의 빈곤은 부부가구의 빈곤과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수준, 혼인상태, 연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빈곤경향과 일치한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자,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부부가구보다는 독신가가 빈곤위험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인에게 이런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생애과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회 및 가능성의 구조 보다 과거의 제도적 제약과 그 속에서 개인이 경험한 생애경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성별에 있어 여성노인이 빈곤에 가장 취약하다. 미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노년기에도 관찰되는 현상인데, 2009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65세 노인 중 남성은 6.6%, 여성은 10.7%가 빈곤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약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WLC, 2010).⁵⁾ 노년기의 빈곤을 생애과정에서 기회와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된 결과로 파악하는 ‘누적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이론’에 따르면, 여성노인은 교육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해 소득과 관련하여 누적된 불이익을 경험하기 때문에 노년의 빈곤위험이 매우 높다(Quadagno, 2005; O’Rand, 1996; 최희경, 2005). 한편, 이와 같은 성별 효과는 교육수준이나 직업력과 같은 변수들을 통제했을 경우 사라지기도 한다.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종, 교육, 혼인지위를 통제했을 때 성이 빈곤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ank & Hirschl, 1999).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빈곤에 취약한 사별가구와 저학력에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인데, 빈곤과 성의 관계는 이와 같은 분포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년의 빈곤과 성의 관계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재은과 임정기(2007)에 따르면, 노인의 인적·가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성, 즉 여성이라는 특성이 노인의 총소득수준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백의(2005)와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기타 가구특성을 통제했을 때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의 효과는 여성노인들이 생애기간동안 경험한 교육에서의 차별과 직업력에서의 불리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5) 2008년 미국 경제위기의 충격은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증가했고, 특히 은퇴연령기(55-64세) 여성들의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NWLC, 2010).

로 해석되었다.

둘째, 연령은 높을수록,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일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Burkhauser & Smeeding, 1994; Rank & Hirschl, 1999). 그러나 노년의 연령은 연대기적 연령의 의미뿐 아니라, 성, 가구형태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연령효과(age effect)를 분리해내기는 어렵다. 고연령자의 높은 빈곤율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가구보다는 자녀와 동거하거나 독신가구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가구유형과도 연관된다. 또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교육기회가 제한되었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cohort effect) 무학, 저학력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령과 교육수준 역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이윤경 외, 2010).

다른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다변량분석에서 연령의 효과는 분명치 않다. 남녀 통합모형을 채택한 연구들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남녀 분리모형을 채택했을 경우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노인빈곤요인을 분석한 최옥금(2007)은 연령효과(연령이 높을수록 빈곤)가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고 남성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2004년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한 석재은과 임정기(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효과가 남성에게서만 나타난다고 밝혀졌다. 두 연구의 자료와 분석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연령은 성별을 비롯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수준은 노인의 출생가족 경제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생애과정에 걸친 기회구조와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의 인적자본과 소득의 관계 이상을 의미한다. Smith(1990)에 따르면, 교육은 청장년 노동자에게는 숙련이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상으로 노동습관이나 개인적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은 노후준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일한 직업력을 가진 노인이라도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빈곤위험이 더 낮다. McLaughlin과 Jensen(1993)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연령, 성별, 결혼상태 및 인종을 통제하더라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현세대 노인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었던 코호트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교육수준을 교육기간 12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교육기간 12년 이상의 노인은 12년 미만의 노인보다 3배 정도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

고 있는 직업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경, 2009; 석상훈, 2009; 최옥금, 2007; 홍백의, 2005; 석재은·임정기, 2007).

최근 국내 노인빈곤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분포보다는 노인의 과거 직업력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직업력을 조작화한 방식은 연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홍백의(2004)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로 직업력을 파악했으며, 최옥금(2007)과 석상훈(2009)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가 노인의 현재 경제 상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최장종사 일자리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개념화하여 분석하였다.⁶⁾ 먼저, 홍백의(2005)에 따르면, 노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최종직종’이며 이를 통제했을 때 성별, 결혼형태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별, 결혼형태별 빈곤율 격차는 과거의 노동형태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생애 소득 곡선에서 은퇴직전, 혹은 최종(최근)직종에서의 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직종이 ‘과거’의 경제력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점에서는 생애 최장기간 근로했던 직종 및 기간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최장직종)’와 관련하여, 가구주의 최장직종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었던 노인의 빈곤율이 농림어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최옥금, 2007), 비임금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임금근로자의 노후빈곤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비정규직임금근로자는 노후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석상훈, 2009).

‘누적 불이익’이론에 따르면, 노인빈곤은 퇴직이나 은퇴와 같은 노년기의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년기 이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만성화된 빈곤이며 평생에 걸친 취약한 노동경력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이기 때문에 청장년기에 유리한 직업력을 축적한 노인일수록 은퇴 후 빈곤위험이 낮다(Choudhury & Leonesio, 1997; O’Rand, 1996; Crystal & Shea, 1990). 본 연구 역시 노인의 과거 직업력이 현재 빈곤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한다. 그런데, 직업력에 주목하는 국내 연구들은 인적 자본과 관련된 변수를 개인변수를 사용하지만 직업력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주의 직업만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즉 가구 안에 남성이 있을 경우 남성의 직종을 투입하고,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여성의 직종을 가구주의 직종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런

6) 직업력을 사용해 노인빈곤을 분석하는 국내 연구는 모두 노동패널데이터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분석전략은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의 노동경력을 분석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으며, 부부가구에서 여성노인의 직업력과 독신가구 여성노인의 직업력이 상이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다소 강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력의 효과에 주목하되, 부부가구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직업력을 변수로 구축하여 각각의 직업력이 노인가구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8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이다. 노인실태조사는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 및 소득, 사회참여, 정책욕구 등의 문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8년 조사는 총 4차년도 중 사례수가 15,146명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조사와 비교하더라도 노인인구에 대한 조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사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자료는 부부가구 노인 모두,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가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노인대상 조사연구와는 달리 부부가구에 속한 남녀노인 개인의 특징과 속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부가구이다. 1994년 노인실태조사에 시작된 이래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4년 26.8%에서 2008년에는 전체 노인가구의 47%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자녀동거가구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4년 조사에서는 54.7%로 노인가구의 절반이상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였던 것에 비해, 2008년 조사에서는 그 수치가 27.6%에 그쳤다. 노인독거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1994년 13.6%에 불과했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19.7%가 독거가구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10).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한 효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의 다수가 배우자가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노인은 사별후 재혼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 독거나 자녀와의 동거를 선택함으로써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노인가구에서 남성노인은 배우자가 있

는 노후를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노인실태조사에서 남성유배우율은 90.4%, 여성유배우율은 47.1%로 나타났다.

2008년 노인실태조사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노인, 고령자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연령기준은 없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연령규정은 없지만, 경로우대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에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격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준으로는 65세가 일반적이다.⁷⁾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층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1994년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2008년에는 70세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2/3를 넘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정경희, 2011). 노인빈곤을 분석한 기존연구에서 노인의 연령은 홍백의(2005)는 만 60세, 최옥금(2007)은 55세, 석재은과 임정기(2007)는 65세, 석상훈(2009)은 60세로 다양하며 합의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빈곤통계연보에서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빈곤율 비교역시 65세 이상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통계의 관행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부부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 노인이기 때문에 개인 자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자료를 변환하여 부부데이터가 되도록 매칭시켰다. 즉, 전체노인가구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를 추출하고, 남편과 아내의 속성변수들이 연결되어 분석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매칭(matching)시켰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노인부부 1,241가구(남편과 아내 각각 1,241명)이다.⁸⁾

7) 정경희(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령에 나타난 노인의 연령규정은 대부분 65세이며, 치매 및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건강검진 및 진단과 관련된 건강보장, 무료급식 등 일부 경우에 60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이지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책영역에 따라 노인 및 고령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상이하며, 절대적인 정책 기준선은 없다.

8) 노인실태조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부가구 모두가 응답한 경우도 있지만 남편 혹은 아내 한 사람만 대답한 부부가구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응답하지 않은 배우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전체 부부가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조사설계에 관한 자료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만 답변한 가구가 특정한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누락이 무작위적인(random) 것이라고 가

2. 변수 및 분석방법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소득은 가처분소득(세후 가구 소득)이다. 노인실태조사는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을 구성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 가처분소득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이외 동거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월 가구소득이 노인부부의 재량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빈곤선은 2008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784,319원을 기준으로 78만원 이하일 경우 빈곤으로 분류하였다. 78만원은 2008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빈곤선(2인 가구 91만원)의 85% 수준이다.⁹⁾

연구대상 부부노인가구의 전체 빈곤율은 49.5%로 나타났다. 부부데이터로 매칭을 하는 가운데, 부부 중 한 사람만 조사된 부부가구가 제외되었는데, 이를 포함한 전체 부부가구의 빈곤율은 48.3%로 표본으로 추출된 데이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유형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61.3%), 기타노인가구(53.6%), 부부가구(43.9%), 자녀동거가구(23.7%) 순으로 나타나, 자녀동거가구의 빈곤위험이 가장 낮다. 이와 같은 추이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다만 빈곤율이 집단에 따라 3-5% 정도 상승한다.¹⁰⁾

본 연구에서 노인빈곤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 직업력, 거주지역, 사적 이전소득을 통해 접근된다. 성별변수는 별도의 변수로 포함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성을

정하였다. 현재 남편과 아내를 매칭하여 각각 1,000케이스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노인 관련 자료는 노인실태조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선택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 9) 200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가구균등화소득은 65만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2인 가구 상대빈곤선을 추산하면 91만원이 된다.
- 10)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절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위험은 노인독신가구>기타노인가구>노인부부가구>자녀동거가구 순이었고 빈곤율은 각각 64.2%, 53.4%, 48.3%, 25.9%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을 적용했을 때 빈곤율은 증가하는데, 상대빈곤선이 절대빈곤선보다 높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노인독거가구의 빈곤율이 77.8%로 가장 높았고, 기타노인가구(55.3%), 노인부부가구(51.4%), 자녀동거가구(25.1%) 순이다. 본 연구의 표본대상인 65세 노인가구는 노인독거가구 80.6%, 기타노인가구 55.2%, 노인부부가구 54.5%, 자녀동거가구 26.9% 순으로 빈곤하다.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연령과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은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교육수준은 남녀 차이를 고려해서 범주를 상이하게 구분하였다. 남성은 무학/초졸/중졸/고졸/전문대졸 이상의 다섯 범주로 구분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무학자가 많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매우 적다(2.4%). 현 세대 여성노인에게 고졸은 고학력에 속하며, 중졸자 역시 상대적 고학력자에 속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을 같은 범주로 묶어 무학/초졸/중졸/고졸 이상 범주로 분석하였다.

직업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 즉 최장종사직종과 이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이다. 최장종사직종은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전문·관리 및 사무직, 판매서비스·기능직이다. 남성의 경우 최장직에 무직이 없으나, 여성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전업주부를 고려하여 무직범주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근무기간은 최장직에서의 근무기간으로 측정하되, 전업주부(무직)는 근무기간을 0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직업력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이 과거의 직업력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현재 일자리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한국 노인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최효미, 2007; 석상훈, 2009) 현재의 근로활동여부를 분석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통제변수로 포함된 가구수준의 변수는 거주형태(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사적 이전소득이다. 김미곤 외(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구특성변인은 가구규모, 가구형태, 기초보장수급형태, 주택점유형태, 거주지역이다. 본 연구에서 가구규모와 가구형태는 각각 2인 부부가구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배제되었고, 기초보장수급형태는 종속변수가 절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여부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두 변인 즉 주택점유형태와 거주지역이 가구수준 변수로 포함되었다.

주택소유여부는 자가 혹은 전월세로 구분되는데, 노인가구의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노인가구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주거와 관련된 지출부담으로 인해 빈곤위험을 높인다. 물론,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자산가치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자가보유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초적 요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주택은 유사시 환급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안전망 구실을 한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거주지역은 광역시, 지방도시, 지방읍면부로 구분되었다. 우

리나라 빈곤율은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의 빈곤율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석재은·임정기, 2007; 강병구 외, 2007). 이는 지역별로 산업구조가 다르고 청장년기의 직업의 기회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대도시지역의 거주노인이 비도시지역의 노인보다 빈곤위험이 낮다(Jenson & McLaughlin, 1997). 농촌지역의 빈곤은 젊은층 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후 고령화된 인구의 빈곤이라는 연령적 특징과 중첩된다(이은우, 2007). 노인빈곤을 비롯해 우리나라 빈곤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동패널자료는 농어가, 즉 지방읍면부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거주자가 많은 읍면 농어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실태조사 자료는 농어가 노인을 포함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 특성으로 추가한 것은 사적 이전소득이다.¹¹⁾ 부부가구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적 이전소득은 한국 노인가구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간주되어왔다. 노동패널자료를 분석한 김희삼(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 소득이전은 성인자녀가구에서 노부모가구쪽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부모가구의 소득이 성인자녀가구의 일상적인 소득이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¹²⁾ 석재은(2000)에 따르면, 65세 이

-
- 11) 노인빈곤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지만, 본 연구의 빈곤선과 소득구성은 공적 이전소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사적 이전소득 모두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간의 격차를 통해 빈곤개선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별도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2) 물론 부모가 '수혜자'가 아니라 '이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 후 분가시 '쌍방향' 이전소득의 규모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이전액이 자녀의 이전액보다 2.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송현주, 2008). 그러나 일상적인 소득이전의 경우 부모가구로의 이전이 보다 일반적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비동거가족에 대한 월간 생활보조금 규모' 변수를 분석했을 때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10% 미만이었으며,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1%에 불과했다. 노인부부가구 중 경제적으로 부유한 10%만이 10만원 이상을 (자녀를 포함한) 비동거가족에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원인이 자녀에 대한 사적 이전지출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자녀에 대한 정기적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는 0.37%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 노인가구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웠고 이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자료의 한계상

상 노인들의 소득원천에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액의 비중은 51.3%,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38.4%,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10.2%로 나타났는데, 사적 이전소득의 규모가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원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¹³⁾

사적 이전소득 변수는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40만원을 기점으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4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본 연구가 채택한 2인 가구 절대빈곤선(78만원)의 절반정도 규모의 이전이 갖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0만원 수준의 이전소득은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빈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 78만원 이상의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자동적으로 비빈곤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간수준인 40만원을 기점으로 사적이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¹⁴⁾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을 설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부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각각 분리모형을 구성해 변수별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남편과 아내의 형태로 연결한 통합모델과 비교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자료가 있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녀의 수는 같고(각각 1,241명) 남편과 아내

이와 관련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웠다. 사적 이전의 양방향적 성격에 대해 숙고할 것을 제언한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한다.

- 13) 강성호(2011)에 따르면 지난 27년 동안(1982년부터 2008년) 노인소득에서 공적 이전의 규모가 증가하고 사적 이전의 규모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공적 부양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부양의식의 변화가 주요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 14) 사적 이전소득과 관련하여 분석결과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변수조작방식을 달리하여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에도 40만원선이 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변수로 투입했을 때는 이전소득규모가 클수록 빈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78만원 이상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비빈곤자가 되는 문제를 낳는다. 한편, 20만원을 단위로 하여 범주화했을 때에도 40만원 이하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 40만원인가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의 지위를 갖고 있다. 연령구성상 남편은 70-74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65-69세가 45.8%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남편이 74.2세, 아내가 70.9세이다. 남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 42.7%를 차지하고, 중졸 16.0%, 고졸, 15.2%, 무학(글을 깨치지 못한 경우 포함) 14.4%, 전문대졸 이상이 11.7%를 차지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가 적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간 학력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50.2%로 가장 많지만 무학자가 31.3%를 차지해 현 노인세대 여성들이 교육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남녀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된 시기를 살았음을 확인해준다.

생애 주된 일자리 경험을 최장근로직종과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을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의 경우 무직은 제외되었고, 농림어업 종사자가 42.9%로 가장 많다.¹⁵⁾ 농림어업에 이어 남성최장직종으로 가장 많은 것은 판매·서비스직으로 23.4%이며, 전문 사무직이 20.1%, 단순 노무직이 13.6%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역시 최장종사직종이 농림어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39.2%). 생애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전업주부)는 28.2%, 단순노무직이 17.6%, 판매서비스직이 11.7%였으며, 전문 사무직이 최장직종인 집단은 3.3%에 불과했다. 최장직종근무기간은 남성은 34.3년, 여성은 23.0년으로 나타났다.¹⁶⁾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은 남성이 40.3%였고 여성은 34.1%로 나타났다. 현재의 근로활동능력과 관련이 있는 건강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5점 척도 중 5는 매우 좋은 편)를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2.6 여성은 2.4로 남성이 약간 높았지만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특성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60.8%, 월 평균 이전소득은 26.3만원이다.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중 40만원 이상의 이전소득이 있는 가구는 25.1%

15) 다른 조사에 비해 노인실태조사에서 농림어업종사자가 많은 것은 표본구성에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의 경우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전국) 중 제주도와 군부지역을 제외하고 시의 동부와 시의 읍면부만을 표본틀로 삼고 있다(한국노동패널 User's Guide). 반면, 노인실태조사는 층화 2단 집락 표집방식으로 7개 광역시와 9개 도시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의 도 지역을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서 표집을 실시했는데, 따라서 이 자료에는 읍면부 노인 표본이 포함되어 있다.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67.9%,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32.1%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가 아닌 지역의 읍면부 노인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6) 전업주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근무기간은 32.3년(표준편차 17.4)으로 증가한다. 현세대 여성노인들 중 전업주부로서 살 수 없었던 노인들은 생애기간 중 상당기간을 근로했음을 알 수 있다.

를 차지했다, 거주지역은 읍면부에 살고 있는 노인부부가구가 38.2%로 가장 많았고 광역시와 지방도시에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각각 30.8%, 3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 83.1%, 전월세 기타가 16.9%를 차지해, 1/6정도가 노년이 되어도 자신의 집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설명변수	부부가구(n=1,241)		
	남편	아내	
연령	65~69세	18.6	45.8
	70~74세	40.0	34.9
	75~79세	26.6	13.5
	80세 이상	14.8	5.9
	평균(세)	74.2	70.9
교육수준	무학	14.4	31.3
	초등학교	42.7	50.2
	중학교	16.0	9.6
	고등학교	15.2	6.5
	전문대 이상	11.7	2.4
최장근로직종	무직		28.2
	전문 사무직	20.1	3.3
	판매서비스직	23.4	11.7
	농림어업	42.9	39.2
	단순노무직	13.6	17.6
최장직종근무기간(년)	34.3	23.0	
현재근로활동	일하고 있음	40.3	34.1
	일하지 않음	59.7	65.9
건강상태(5점 척도)	2.6	2.4	

설명변수	부부가구(n=1,241)	
	남편	아내
사적 이전소득	있음	60.8
	40만원 이상	25.1
	40만원 미만	74.9
	없음	39.2
	월 평균금액(만원)	26.3
거주지역	지방읍면부	38.2
	광역시	30.8
	지방도시	31.0
거주형태	자가	83.0
	전월세 기타	17.0

2. 노인부부가구 빈곤결정요인: 통합모형 분석

이 연구는 우선 부부가구를 구성하는 개인, 즉 남편과 아내를 별도의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분리모형')한 후, 가구수준에서 남녀를 통합('통합모형')하여 남편과 아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였다. 현재까지 노인빈곤 연구의 관행은 남녀를 모두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가구주모형'), 배우자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비해 분리모형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을 개인으로, 즉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부부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부부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는 '커플데이터'적 속성에 주목하여 부부 변수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구성하였다.

먼저 '분리모형'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위험이 감소했다(<표 2>).

과거 직업력을 살펴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단순 노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경우 전문 사무직>농림어업직>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무직자(전업주부)의 빈

곤위험이 약간 낮았지만 다른 직종들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경우 근로기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근로기간이 길수록 빈곤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세대 여성 퇴직자들은 성별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주로 저임금 노동자로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지경, 2005) 직종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2차 소득자로서 가구의 빈곤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근로능력 및 근로활동여부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징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40만원 이상의 사적 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빈곤율이 낮아졌으며,¹⁷⁾ 자가에 살고 있는 노인이 전월세에 살고 있는 노인보다 빈곤위험이 낮았다. 거주지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자는 주로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등 거주지역적 특징과 종사직종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7) 사적 이전과 관련하여 40만원 이하일 때 남성의 경우 빈곤위험이 증가하나 여성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여성분리모형에서 관계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사적 이전이 유의하지 않은 것은, 사적 이전은 노인남성의 소득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해, 현 세대 노인가구의 일차적 생계부양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의 지원(사적 이전)은 여성의 소득력보다는 남성의 소득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별분리모형에서 여성모형은 남성의 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남성의 효과를 통제한 통합모형과 차이가 발견되며, 반면 분리모형에서 남성과 관련된 결과는 통합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분리모형과 통합모형의 결과해석에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논평자의 지적에 감사한다.

<표 2> 노인부부가구 빈곤요인에 대한 로짓: 성별분리모형

	남성(n=1,241)		여성(n=1,241)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상수	-1.216	1.132	.026	1.090	
연령	.0517 ^{***}	.0139	.032 ^{**}	.014	
학력 (무학)	초등학교	-.534 ^{***}	.203	-.629 ^{***}	.143
	중학교	-.803 ^{***}	.246	-1.532 ^{***}	.251
	고등학교	-.889 ^{***}	.260	-1.550 ^{***}	.283
	전문대이상	-1.513 ^{***}	.325	-	-
개인 직종 (단순노무직)	무직	-	-	-.424 ^{**}	.230
	전문사무직	-1.727 ^{****}	.280	-.560	.444
	판매서비스직	-.701 ^{***}	.230	-.263	.237
	농림어업	-.723 ^{***}	.243	.016	.202
건강	-.176 ^{***}	.064	-.210 ^{**}	.070	
최장직종근무기간	-.002	.006	-.012 ^{**}	.006	
현재근로활동	-.856 ^{***}	.166	-.658 ^{***}	.171	
사적 이전소득 (없음)	40만원 이하	.411 ^{**}	.208	.273	.198
	40만원 이상	-.498 ^{**}	.238	-.461 ^{**}	.228
가구 거주 지역 (읍면부)	광역시	-.143	.184	-.228	.179
	지방도시	.043	.174	-.015	.171
	주택소유여부(자가)	-.467 ^{**}	.186	-.673 ^{***}	.177
LR chi2(24)	271.66		176.93		

주(1): () 범주형 변수의 준거집단임

주(2): * p<0.1, ** p<0.05, *** p<0.01

이와 같은 ‘분리모형’은 남녀노인이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개인적 특성을 통해 빈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부부가구의 빈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들이 ‘부부가구’라는 점, 즉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녀통합모형’을 구성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되어 있다.¹⁸⁾

먼저, 연령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위험이 증가하지만 ($P < 0.1$), 아내의 연령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따로 살펴본 분리모형에서는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부부가구의 특성상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남편의 연령효과에 아내의 연령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의 연령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최현수와 류연규(2003)는 고령일수록 자녀와의 동거비율이 높기 때문에 빈곤이 감소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백의(2005)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부가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후자와 일치한다. 다만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빈곤위험은 남편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아내의 연령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년의 경제적 상황을 빈곤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있어 여전히 남성의 고령정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남녀통합모형에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일 때 빈곤위험이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빈곤과 학력의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노인에게 학력이 갖는 소득효과는 출생가족의 자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생애기회구조가 다르게 분포함으로써 생애과정동안 누적적 이점(O'rand, 1996)을 누릴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을 통제했을 때 아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인 고졸 학력이 누리는 이점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세대 여성노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 고학력자이고 이들 여성의 성역할 규범은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남성의 학력과 직업에 의해 빈곤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최장종사직업의 직종과 근무기간 변수는 직업력과 노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된 변수이다. 남성의 경우 빈곤위험이 가장 높은 단순 노무직을 최장종사직업의 기준범주로 투입했을 때, 모든 직종에서 유의하게 빈곤위험이 감소했다. 특히 전문 관리직 및 사무직이 가장 빈곤위험이 낮아 단순 노무직의 약 1/5($b = -1.743$) 수준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과 농림어업직은 단순 노무직의 절반정도의 빈곤위험을 보였는데 농림어업직이 약간 빈곤위험이 더 낮

18) Likelihood test 결과 분리모형에 비해 통합모형의 적합도가 증가했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편의 특성을 통제했을 때, 여성의 생애 최장종사직종은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분리모형에서도 나타났듯이 남성의 경우 생애 최장종사직종은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지만, 해당직종에서 근로연수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반면 여성은 직종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로연수는 유의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년기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지 않고 직종의 차이가 여성의 소득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차이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구의 이차 노동력으로서 저소득직에서 일하더라도 생애 장기간 근로는 부부가구의 빈곤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아내의 직종효과 중 무직(즉 평생 전업주부)의 효과는 분리모형일 때는 빈곤위험을 낮추었지만, 통합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남편의 소득력이 높을수록 아내가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전형적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남편 변인이 통제된 통합모형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의 현재 경제상황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업력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다수 노인들의 일차적인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다(최유미, 2007). 현재 근로활동여부의 경우 남성은 현재 경제활동참여가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현재의 근로활동 여부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이고 대개 남성보다 여성이 65세 이후 노동과 관련하여 은퇴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부가구 여성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성 배우자와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수준은 남녀 모두 건강할수록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건강은 현재의 근로능력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노인의 경우 생애기간 동안 건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누적된 불이익이 없거나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사별노인여성의 빈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별과 더불어 여성들이 빈곤해지는 것은 사별로 인해 남편의 소득 기여가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별이전부터 질병으로 인해 소득원이 상실되고 의료비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빈곤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과 소득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McGarry & Shoeni, 2005).

<표 3> 노인부부가구 빈곤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남녀 통합모형

설명변수		전체		
		계수	표준오차	
상수		-.659	1.284	
연령		.039*	.020	
남편	학력 (무학)	초등학교	-.316	.229
		중학교	-.520*	.274
		고등학교	-.525*	.296
		전문대 이상	-1.068***	.386
	직종 (단순노무직)	전문사무직	-1.743***	.291
		판매서비스직	-.677***	.239
		농림어업	-.642**	.257
	최장직종근무기간	.002	.006	
	현재근로활동	-.760***	.188	
	건강	-.148**	.067	
연령		.014	.022	
학력 (무학)	초등학교	-0.301*	.171	
	중학교	-.708**	.296	
	고등학교	-.412	.358	
아내	무직	-.140	.254	
	직종 (단순노무직)	전문사무직	-.132	.476
		판매서비스직	-.122	.258
		농림어업	.204	.220
	최장직종근무기간	-.014**	.006	
현재근로활동	-.249	.199		
건강	-.157**	.077		

설명변수		전체		
		계수	표준오차	
가구	사적 이전소득 (없음)	40만원 이하	.398*	.212
		40만원 이상	-.534**	.243
	거주지역 (읍면부)	광역시	-.229	.191
		지방도시	-.029	.181
	주택소유여부(자가)		-.455**	.189
LR chi2(27)		293.88		

주(1): () 범주형 변수의 준거집단임

주(2): * p<0.1, ** p<0.05, *** p<0.01

통제변수로 포함된 가구특성 변수의 경우, 먼저 거주지역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중소도시, 읍면부(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McLaughlin & Jenson, 2000; 최현수·류연규, 2003), 본 연구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다. McLaughlin과 Jenson(1993, 2000)은 노인빈곤의 도농격차를 강조하면서 미국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음을 밝혔다. 최현수와 류연규(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서울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보다 전남, 경북과 같은 지역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지방간의 노인빈곤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도 대도시 노인이 중소도시 노인보다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 바 있다. 기존연구와 결과가 다른 이유로는 첫째, 이 연구가 노인부부가구라는 특수한 유형의 가구형태만을 선별하였고 빈곤위험이 높은 읍면부에 살고 있는 노인독신가가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간 빈곤격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노동패널이나 가계조사자료는 시부가 아닌 읍면부 지역 농어가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노인가구의 특성이 분석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 읍면부 거주 노인가구의 다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역의 효과로 나타나던 것이 사실은 직종의 효과를 은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해

석도 조심스럽게 내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자가가 전월세보다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에서 주택소유는 과거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재의 자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Hungerford, 2007). 물론, 농촌지역의 경우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가치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택보유가 갖는 자산적 의미를 고려할 때 전월세에 주거하는 노인의 경우 생애기간동안 축적된 자산이 적은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석결과 역시, 노인부부가구에서 주택보유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빈곤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이 없는 집단 대비 4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빈곤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사적 이전소득은 여전히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위험을 감소시키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월 40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의 사적 이전을 받는 노인들은 빈곤위험이 오히려 높으며, 40만원 이상일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¹⁹⁾

V.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빈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있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노인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노인가구 중 최빈가구인 노인부부가구의 빈곤상황에 주목하였다. 노인부부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가구형태이다. 그러나 노인부부가 분석대상으로 채택된 것은 단지 양적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19) 사적 이전소득을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과 10만원 미만으로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수준의 낮은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가구주 변수에 주목함으로써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주로 남성(가구주)의 속성만이 반영되고 여성배우자의 속성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목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구생계의 일차적 책임자는 남성이겠지만, 저소득층일수록 가구주의 부양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구주뿐 아니라 배우자 및 다른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기여가 증가한다. 즉 빈곤을 벗어나는데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경제활동이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부부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특징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분석모델에 남편(가구주)뿐 아니라 아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소득총합단위(income pooling unit)로서 가구의 내적 동학과 기여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단순히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직업력, 즉 생애노동기간과 직종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생애노동력이 현재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노인 혹은 노년은 연대기적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노년은 출생, 성장, 분거, 결혼, 자녀양육, 은퇴라는 생애주기에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이 경험은 현 노인세대의 특수한 코호트적 경험과 교차되어있다. 한국의 노인세대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농촌이 '노인화'되고 평생혼과 출산이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했고, 또 가부장적 사회질서 속에서 남성이 일차적 생계부양의 책임을 짐으로써 남성의 지위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밀접한 연관을 맺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또 노년의 과정 역시 질병과 사별 등의 생애사건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세대는 이와 같은 이질성과 복합성으로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다. 노후의 경제적 상황, 노인빈곤 역시 이와 같은 노인세대 경험의 복합성, 또 노인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부라는 특정한 가구형태 속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에 있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직업력이 노인가구의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복합적인 노인빈곤의 한 측면을 해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노인부부가구에서도 남편(가구주)의 연령, 학력, 생애 주된 일자리는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 종사했을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경우 교육을 제외한 연령, 생애 주된 일자리의 영향력은 남편의 변인들을 통제했을 경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노년의 빈곤을 방어하는데 있어 남

편의 소득력이 더 주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이 남성중심의 노동 시장구조와 성별분업에 의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미시적인 수준에서 노년의 경제적 안정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성 생계부양자의 직종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남성이 '좋은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낮다. 이는 생계부양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을 경우 노후의 소득과 자산이 높기 때문이고, 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에서도 기인한다.

주목할 점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의 직업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내의 경우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종'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로기간이 길수록 가구의 빈곤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빈곤을 방어하는데 있어 여성노인이 (상대적) 고소득직종에 종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얼마나 오랜 기간 일을 해왔는가 중요하다. 현 세대 여성노인들에게 고소득직종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은 주로 농림어업이나 성별분절화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근로했을 가능성이 높다. 빈곤과 관련하여 여성노인에게 직종효과는 드러나지 않지만 근로기간의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이들 여성노인이 장기간의 근로를 통해 가구의 최후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노인빈곤을 이해하는데 있어 남성가구주의 경험뿐 아니라 여성노인들의 생애경험에도 주목하는 성인지적,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노인 소득보장에서 공적 이전의 역사가 일천하고, 최근에서야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서 노인소득보장은 가장 먼저 정비된 영역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빈곤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비교역사적 교훈 속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현실화되고 노령연금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등 공적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공적 이전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간격을 불안정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 자녀로부터 사적 이전이다. 우리나라 노인가구는 자녀와의 동거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 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위험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부양의식에 있어서도 자녀에 의한 부양을 기대하는 노인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년의 소득에서 자녀

로부터 사적 이전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²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적 이전을 통해 빈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청장년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청장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고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는 노동현실에서 사적 이전에 의존한 부양방식은 노년기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부양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사회적 권리'에 필수적인 공적 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을 축소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빈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한결같이 생애과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년의 빈곤은 청장년시기의 불평등한 기회구조 및 차별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빈곤은 노년에 시작되기 보다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년의 빈곤은 성별로 차별화된 구조와 누적적 과정의 산물이다. 노인부부가구 빈곤에 대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젠더화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노인빈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노인부부가구 여성의 빈곤은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의해 구조화된 생애과정을 반영하지만 여성 자신의 노동경력 역시 빈곤을 방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청장년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성차별적 임금구조를 개선해 가는 것을 통해 여성(개인)들이 독자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화된 노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한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효과로 '공적 부양'이 빠르게 늘면서 가족, 친인척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부양'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1.4.21.).

■ 참고문헌

- 강병구 · 성효용 · 윤명수. 2007.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성호. 2011.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 『재정정책논집』 13(1): 113-144.
- 김미곤 · 송치호 · 오지현 · 유현상. 2007.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한 지역별 빈곤현황 및 요인.”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 김태완 · 전지현. 2010. 2010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석. 2003. “노후생활에서의 성별차이-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6(1): 59-77.
- 김지경. 2009.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지경 · 송현주. 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김희삼. 2008.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 30(1): 72-130.
- 보건복지가족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 석상훈. 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석재은. 2000. “노인의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51-76.
- 석재은 · 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1-22.
- 이소정. 2010. “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235-260.
- 이윤경 · 정경희 · 엄지혜 · 오영희 · 유혜영 · 이은진. 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우. 2007. “농촌빈곤의 결정요인과 빈곤층의 특성.” 『농촌경제』 30(4): 87-103.
- 정경희. 2011.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100세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옥금. 2007.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1): 5-25.
- 최효미. 2007. “노인가구의 소득원천.”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최현수 · 류연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Bound, J., Greg J. Duncan, Deborah S. Laren and Lewis Oleinick. 1991. "Poverty Dynamics in Widowhood." *Journal of Gerontology* 46(3): S115-124.
- Burkhauser, R. and T. Smeeding. 1994. "Social Security Reform: A Budget Neutral Approach to Reducing Older Women's Disproportionate Risk of Poverty." Policy Brief No.2. Syracuse University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NY.
- Burkhauser, R. V., Butler, J. S. and Holden, K. C. 1991. "How the Death of a Spouse Affects Economic Well-being after Retirement: A Hazard Model Approach." *Social Science Quarterly* 72(3): 504-519.
- Burkhauser, R. V., K. C. Holden and D. Feaster. 1988. "Incidence, Timing, and Events Associated with Poverty: A Dynamic View of Poverty in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43(2): S46-52.
- Dodge, H. H. 1995. "Movements Out of Poverty among Elderly Widow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0: S240-S249.
- Fisher, Jonathan D., Johnson, D., Marchand, J. T., Smeeding, T.M. and Barbara B. Torrey. 2009. "Identifying the Poorest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B* 64(6): 758-766.
- Hungerford, Th. 2007. "The Persistence of Hardship over the Life Course." *Research on Aging* 29(6): 491-511.
- Hurd, Michael D. and Susann Rohwedder. 2006. "Economic Well-being at Older Ages: Income and Consumption-based Poverty Measures in the HR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680.
- McGarry, K. and R. F. Schoeni. 2005. "Widow(er)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 of Gerontology B* 60(3): S160-S168.
- McLaughlin, D. K. and Jensen, L. 1993.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The Plight of Nonmetropolitan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48(2): S44-54.

_____. 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4): 469-479.

National Women's Law Center. 2010. "Poverty among Women and Families, 2000-2009: Great Recession Brings Highest Rate in 15 Years." <http://www.nwlc.org/resource/poverty-among-women-and-families-2000-2009-great-recession-brings-highest-rate-15-years>.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O'Rand, A.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Disadvantage and Cumulative 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2): 230-38.

Quadagno, J. 2005. *Aging and the Life Cours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McGraw-Hill Companies.

Rank, M. R. and Thomas A. Hirschl. 1999. "Estimating the Proportion of Americans ever Experiencing Poverty during Their Elderly Years." *Journal of Gerontology* 54(4): 184-193.

(2011. 6. 2. 접수, 2011. 9. 14. 심사, 2011. 9. 20. 채택)

Abstract

Poverty of the Married Couple Households in Old Age: The Effects of Gender and Work History

Kim, Su-Jeong, Dong-A University

Kim, Cheong-Seok, Dongguk University-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auses of the poverty of elderly couples. Elderly population is composed of diverse and heterogenous groups. Married couple household is the biggest subgroup, accounting for 40% of all the elderly households. Previous studies are limited in explaining the causes of poverty in old age by using only the characteristics of husbands(householders), ignoring the factors related to wives which also influence the couples' economic status.

The results indicate that age, education and work history of husbands are significant factors causing poverty in elderly households that reflect male breadwinner structure in Korean families. However, the work history of wive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to reduce old age poverty in couple households. Especially, long years of working time of wives effectively buffer against the poverty of the elderly family. Such results suggests that gender sensitive approach is needed to explain the poverty of married couple in old age and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ner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old age poverty.

Key Words: elderly poverty, work history, married couple, gender